

독일의 대학교육, 어디로?

윤동현 | 독일 뮌스터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

I. 변화의 물결

2008년 7월의 어느 날,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뮌스터대학교¹⁾, 다음 겨울학기 신입생 입학지원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학입학처와 중앙상담소는 빗발치는 문의에 안내 및 상담업무로 분주하기만 하다. 대학 내에 개설된 학과들은 이제 대부분 학사(Bachelor), 석사(Master)학위과정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드물었던, 그래서 기성세대와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아직도 낯설기만 한 배철러, 매스터과정. 독일의 전통적인 마기스터(Magister)와 디플롬(Diplom)학위는 점점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사업무도 네트워크화 되었다. 입학지원부터 수강신청, 시험등록처리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각 학과에서 규정된 졸업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교과과정은 교양, 전공(필수, 선택)과목으로 나뉘었다. 학사과정은 보통 3년의 커리큘럼이며 석사과정은 2년 동안 짧게 되어 있다. 옛날의 마기스터와 디플롬의 수료기간 5년을 적당히 나는 것 같은 인상도 준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대학본관 앞은 몇몇 학과의 신입생환영회 이벤트행사로 떠들썩하다.



사진 1.

우리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러한 모습들은 독일인들에게는 그저 낯설기만 하다.

II. 볼로냐 공동선언, 개혁의 시작

독일대학교육개혁의 발단은 1999년 이탈리아의 볼로냐(Bologna)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작은 독일만의 고민이 아니라 유럽연합차원의 고심의 결과였다. 29개 국 교육부장관 31인이 공동서명한 선언서, 일명 “볼로냐선언”²⁾으로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대학현실을 진단하고 개혁방향

1) 220여년 이상의 전통이 있는, 독일 내에서 대략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대학교다. 130개 이상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 2007년 겨울학기 재학생 수는 38200명(1999년 최고 45000명 초과)이었고, 2006년도 예산이 의대를 제외하고 2억4천만 유로였다.

2) “유럽 고등교육공간. 유럽 교육부장관 공동선언”. 1999년 6월 19일, 볼로냐.

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 곳에 참여했던 교육관계자들은 유럽연합이 이제 정치,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더욱 강화된 동질성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나라의 상이한 대학교육제도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데에 그 인식을 공유한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인재들에게 “유럽”이라는 정치, 경제, 문화공동체 속에서 학력을 동등하게 인정해 주고 학문적, 직업적 교류에 제한이 없도록 활동의 장을 넓힌다는 의의가 있음이 선언서는 밝히고 있다. 선언서에 명시된 구체적 달성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 간 상호 이해, 비교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로써 현 노동시장에 적합한 취업자격조건 마련과 유럽대학시스템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촉진한다.
2. 대학교육 과정을 학부와 대학원 두 단계로 나눈다. 대학원입학은 학부졸업을 그 조건으로 한다.
3. 학점제를 도입한다. 이로써 유럽 내 대학생 상호교류를 극대화한다.
4. 학생, 교수, 교직원 등의 상호교류, 공동연구 등 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히 커리큘럼 개발, 대학 간의 공동연구, 교환프로젝트, 통합교육연구프로그램 등의 분야를 지원한다.

또한 이 선언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각 나라의 독자적 언어, 문화상황과 각 대학의 자립성을 절대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 정부차원의 모든 정치력을 동원하여 지

원하겠다는 공약식 발언뿐 아니라, 2010년 이내에 목표 실현을 이루겠다는 시간적 의지표명도 담고 있다.³⁾

독일의 적지 않은 대학교수들은 이러한 정치가들의 개혁의지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 들뿐만이 아니었다. 독일은 토론이 매우 왕성한 나라다. 무엇이든 논쟁 없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 독일의 몇몇 언론은 더욱 강력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⁴⁾ 위의 열거된 조항들을 자세히 보면 맨 먼저 중요하게 언급된 대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시장경제의 원칙. 글로벌시대, 국제경쟁력강화, 효율성 증대라는 말 뒤에는 모두 한결같이 돈의 원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대학교육은 이제 더 이상 인성발달, 인간교육, 자율적 학문탐구에 그 모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 실무능력을 갖춘 노동인구의 양성이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학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돈의 경제원칙이 정치활동과 매우 밀접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되돌아보자. 이 볼로냐 공동선언은 대학 내부에서 용솨음쳐 오른 갈망의 몸짓이 아니다. 그야말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낙하산식의, 유럽연합이라는 이상을 사회 각 분야에 적용시키려는 정치가들의 선언인 것이다. 최후 시간마저 선포되어 있다. 아무리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며 몸부림을 쳐도 각 대학들은 볼로냐선언의 합의내용을 실현시켜야 한다. 각 대학이 지금 학과개편 및 교과과정개혁으로 뒤늦게 매우 분주한 것은 지금이 당연해 보인다.

3) 2007년도 여름학기 통계에 의하면 독일 내 대학 전체학과의 48%가 학사, 석사과정으로 변경 개설되었다. 학문분야로는 농학, 삼림학, 식료품학, 공학계열, 사회과학계열에서 60%이상의 변경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방주별로 보면 베를린이 81.3%로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절대 수치로 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월등히 많은 학사, 석사과정이 개설되었으나 기존의 (아직 바뀌어야 하는) 총 학과수가 다른 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학사 및 석사과정 도입상황 통계자료집. 2007년도 여름학기. 고등교육정책 통계집. 1/2007호. 대학총장협의회 편. 본 2007 (Statistische Daten zur Einführung von Bachelor- und Masterstudiengängen. Sommersemester 2007. Statistiken zur Hochschulpolitik 1/2007. Hrsg. v. Hochschulrektorenkonferenz(HRK). Bonn 2007).

4) 독일 일간지, 주간지 기사 중 주제, 부제 몇 가지만 소개한다: “훔볼트여 안녕! 독일의 모든 개혁정책, 정제되었나? 아니다. 독일대학은 극단적으로 개조되고 있다. 효율성이 그 목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곳 본(Bonn)에서도”. 디 차이트(Die Zeit), 2006년 5월 4일자. 19호: “생활양식의 종말. 훔볼트에서 볼로냐로: 독일대학의 숨막히는 몰락”. 쾰른도이체 차이퉁(Sueddeutsche Zeitung), 2007년 6월 21일자: “분수를 지켜라! 200년 전 프로이센의 개혁: 이제 겨울학기가 시작되면 훔볼트 업적의 잔재는 대학에서 폐기처분 된다”. 벨트 온라인(Welt Online), 2007년 10월 9일자. www.welt.de/welt_print/article1246450/Schuster_bleib_bei_deinen_Leisten.html.

Ⅲ. 훔볼트의 인문주의 교육이념은 낡았다?

약 200년 전 독일에선 대대적으로 대학교육이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늘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1767~1835)라는 이름이 따라 다니는데, 그가 바로 그 개혁을 주동한 장본인이었다. 그는 인간을 숭고히 여긴 휴머니스트였으며 학문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직업은 정치가, 외교관이었으나, 철학, 문예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언어학에서는 독자적이고 걸출한 이론과 방법론을 창출하였고, 인문주의 교육개혁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는 놀랍게도 자기가 관심을 가졌던 모든 분야를 자신의 철학적 일관성으로 접근하였다. 그의 정치관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에 그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교육도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인간의 자식을 우선 인간으로 교육해야지, 장인의 아들이라고 장인이 되는 교육만 받는 것은 오류라고 단정한다. 그래서 그는 일반(인문주의)교육의 중요성을 특수(직업)교육과 분리하여 부각시켰다. 대학에서의 공부도 역시 이와 같은 인문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훔볼트가 말하길, 대학교수란 이제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어야 한다. 또 대학생이란 선생들로부터 무엇을 전달받고 습득해야하는, 그런 배우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그는 대학생을 창의적이며 자발적으로 학문을 탐구하는 독립적 개체들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자기 업적을 평가받지 않으며, 언제까지 공부를 끝내고 졸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따윈 있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통제와 자율에 따라 자기 자신만이 자신의 행위를 평가,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여기

에 학점, 평점이 있을 수 없고 필기시험을 통한 합격불합격의 갈림길이 생겨날 여지가 없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그러한 독자적 연구를 이끌어 주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도우미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자율적 학문 탐구는 그 행위자체로 뜻 있는 일이 되며, 그 어떤 제 3자의 목적에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명제가 성립한다. 게다가 훔볼트는 이러한 이상적 이념아래 당시 귀족 특권층 자녀에게만 허용되었던 대학교육의 장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열어 놓았다. 기회균등의 시대가 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말하는 대학교육개념은 연구와 교육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일돼 맞물려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 학생들이 창의성과 자발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 어떤 이해집단으로부터도 철저히 자유롭고 독립된 개념이다. 훔볼트의 교육철학은 그래서 이상형의 인간형성을 그 중심으로 한다. 직업교육은 그렇게 형성된 인문주의적 인간성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⁵⁾

현재 21세기의 독일대학개혁은 훔볼트의 이러한 이념에 사실상 정반대의 노선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은 다시 직업교육이어야 하며 그래서 학문의 실제적 적용가능성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바뀌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옛 제도에서처럼 개인의 자유와 관심영역에 따라 공부하다 실천지식 없이 지지부진 5년, 10년 만에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짜여진 교과과정 규율에 따라 3년 안에 빨리 끝내고 직업전선에 뛰어 들어야 하는 것이다. 교수들도 예전처럼 자신의 자율적 연구와 학생교육을 결합시키면서 강의를 여는 것이 아니라, 꼭 짜여진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대학교육을 연구 활동으로부터 분리한 데에는 필연적 이유가 있다. 비판적 성향이 강한 독일의 일간지 타츠

5) 훔볼트의 생애와 더욱 방대한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티만 보르쉐(Tilman Borsche: Wilhelm v. Humboldt. München: Beck 1990)가 매우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지면상 출처를 일일이 다 달 수 없는 훔볼트의 저술은 그의 사후 발간된 전집에서 참고하였다(Wilhelm von Humboldt: Gesammelte Schriften. Im Auftrag der (Königlich)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Hrsg. v. Albert Leitzmann u. a. 17 Bde. Berlin: Behr 1903-1936. (Nachdruck: Berlin: de Gruyter 1968)).

(taz)는 다음과 같이 비평하고 있다: “독일고등교육제도의 혁명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 요소들은 바로 대학 자율화와, 학사석사제도 도입을 못 박은 볼로냐선언 구현, 그리고 등록금제 도입이다. 이 세 요소는 우연하게도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심지어 서로 구속관계에 있다.”⁶⁾ 이는 현재 독일 교육정책 동향의 핵심적 고리를 간파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독일의 각 연방 주는 최근 몇 년 사이 대학자율화법을 통과시켰다. 언뜻 듣기에 매우 좋은 것처럼 들리나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다. 현재 독일의 대부분 대학은 주립 대학이다. 각 대학들은 재정을 주정부에서 지원 받았기에 그리 각박한 형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이 통과된 대학자율화법은 그 핵심내용으로 대학재정의 독립을 명시하였다. 즉, 주정부가 각 대학에 하던 재정적 지원을 대폭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각 대학의 재정난은 이제 명백한 현실이 되었다. 게다가 볼로냐선언으로 인해 시장경제원칙이 주도하는 자율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몇 년 전까지 - 얼마 되지 않는 학생회비, 사회기금 등을 제외하면 - 무료였던 대학교육이 이제 유료화⁷⁾되어야 하는 이유는 필연이 되고 말았다. 이로써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이념이 포기되었다는 비판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며 대학도 거기에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견해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로써 대학교육의 내용적 변화방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상을 띠게 된다: 이론적 순수과학에서 응용과학으로; 단일학문에서 학제 간 공동학문으로; 교수개인의 연구경향에 따른 우연적 강의개설에서 지식획득을 위한 필수커리큘럼의 확정으로; 장기간의 마기스터, 디플롬 과정에서 속성의 학사, 석사과정으로; 대학교육의 무료화에서 유료화로.

IV. 구체적 사례: 뮌스터대학교의 학과개편

나는 현재 뮌스터대학교의 중앙상담소에서 학과 관련 정보관리를 담당하고 있기에 학과개편에 관한 한 비교적 깊이 있는 최신 정보를 접하고 있어 몇 가지 예를 선정하는 데 다행스럽게도 매우 용이하였다. 물론 이 사례들은 독일의 타 대학에도 비슷하게 출현하므로 어느 정도 대표성도 지니고 있다고 나는 본다. 한국의 상황에서 참고로 삼을 수 있는 특기할만한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겠다. 뮌스터대학교에는 초등, 중등교사양성을 담당하는 교육대, 사범대도 함께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의 교사양성제도는 나름대로 독립적이며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으므로 여기 짧은 지면에 모두 소개할 수 없으므로 사례설명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현재까지 설치된 학사과정은 (사범대를 제외하고) 크게 단수전공학과와 복수전공학과로 나뉜다.⁸⁾ 입학지원 당시부터 지원자는 이를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과들은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몇몇 새로운 변화들이 목격된다. 외형상 첫째로 눈에 띄는 것은 기존의 “-학”이라고



사진 2. 뮌스터 대학교 본관

6) 타츠(taz), 2005년 3월 9일자.

7) 독일대학의 등록금은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그 액수에서 상대가 되질 않는다. 현재 뮌스터대학교의 한 학기 등록금은 275유로(현재 환율 최고치 1:1600으로 계산해도 44만원)이며, 뮌스터전문대학은 500유로이다. 그러나 얼마 전 헤센(Hessen)주에서는 대학등록금을 폐지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래서 다른 주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대시위가 다시 거세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8) 뮌스터대학교에 설치된 전 학과에 대한 정보는 다음 인터넷페이지에 잘 안내되어 있다: <http://zsb.uni-muenster.de/sf>



사진 3. 윈스터 대학교 철학부 건물

이름이 붙었던 학과 명칭들이 부분적으로 타파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여기엔 지역학 내지 문화학과의 접목을 시도하려는 유행도 한 몫 하는 듯하다: 네덜란드-독일-연구; 동중부유럽 지역연구; 아랍이슬람문화; 언어, 텍스트 그리고 정보; 유럽연구; 음악과 창의력 (실기위주); 음악과 전달 (음악교사 양성); 음악활동과 새로운 매체; 중국연구 등이 새로운 학과 명칭의 예다. 이러한 경향은 학제 간 공동연구학과에서도 나타난다: 고대문화 (고전문헌학과 역사학과의 합작), 경제와 법; 정치와 경제; 정치와 법 (각각 독립된 전공분야로 경제학과, 법학과, 정치학과의 합작).⁹⁾ 석사과정은 근본적으로 단수전공제도인데 학제 간 공동학과설치의 경향과 개별학문분야의 심화가 동시에 돋보인다: 고대라틴문헌학과 그 수용; 동부지중해의 고대문화; 문화사회인류학; 문화와 사회학의 기독교; 비교문학; 아랍의 언어화 문학; 응용언어학; 의약품학 (화학과의 합작); 중세와 근세의 라틴문헌학 등이 그것이다. 또한 석사과정 중에는 영어전용학과도 설치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British, American and Postcolonial Studies; European Studies; Geoinformatics; Geospatial Technologies; Information Systems; National and Transnational Studies; Literature, Culture, Language.

각 학과의 교과과정은 개별적으로 단과대나 학과내부에서 교수회의를 거쳐 상정된 후, 최후 총장의 서명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개설되는 강의들은 해당 전공분야의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고, 학생들은 학칙에서 요구하는 전공필수, 선택필수, 교양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매 학기마다 수강해야 하는 강의의 내용수준은 학기가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도록 짜여져 있다. 외국연수나 직업현장에서의 실습을 필수로 넣어 가산점에 넣는 경우가 많다. 지면상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없음을 사과드린다.

V. 변화의 요인과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국제경쟁의 시대라는 정치경제의 현실 속에서 독일의 대학들도 변화를 요구 당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대학개혁은 표면적으로, 유럽연합의 정치노선에 따라 단일한 유럽대학제도를 구축한다는 방대한 프로젝트 안에서 그 정확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이 (본 글에서는 자세히 다룰 수가 없었지만) 언론과 학술대회를 통해 교육철학, 교육정책, 학문론에 이르기까지, 두루 진지한 토론 작업을 거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독일의 새로운 대학제도는 그 형태상 미국식 대학들과 차이가 없어 보이나, 우리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한 구조이다. 각 학과마다 경우의 다양성을 많이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단일체제로 통합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집단적 획일화가 아닌 개별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근본취지는 우리에게 신선한 경종을 울린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재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제 간 공동학과개설은 아직 시작단계여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전문성과 일반성의 관계가 변증법적으로 통합되는 힘을 발휘한다면 미래지향적인, 그야말로 특화

9) 그밖에도 윈스터에는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국가 간의 합작학과들도 있다. 주로 정치학분야에서 이루어 졌는데 독일이 네덜란드, 프랑스, 루마니아 등의 개별대학과 연계하여 공동 설치하였다. 학생들이 서로 각 대학에서 공부하다 일정 학기를 상대국 대학에서 보낸다. 졸업 시엔 두 나라에서 발행하는 졸업장을 동시에 수여받는다.

된 통합학문을 여는 초석이 아닐까 조심스레 전망해 본다. 학문의 역사는 분석과 통합의 상호작용의 역사가 아닌가 한다. 한 편으론 세분화될 때까지 분화된 개별학문이 점차 통합학문으로 향로를 바꾸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다른 한 편으론 그런 경향에서도 세분화, 전문화의 모습이 함께 보인다. 독일대학의 이 모든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아직 끝이 나질 않았다. 유럽공동의 제한된 개혁들 속에서 독일인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자신들만의 독특한 내용을 담아 개혁 작업을 성공리에 마칠 것인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필 · 자 · 소 · 개

윤동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교육과 및 동대학교 대학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현재 독일 뮌스터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뮌스터대학교 교육학과 및 대학중앙상담소 학생조교 및 연구조교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뮌스터 대학교 중앙상담소 정보매니저로 근무 중이다.